

# 정황근 “식품 원료가격 올랐다고 양 슬쩍 줄이는건 꼼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원료가 인상대비 과다인상 주시  
“원료가 인하여 따른 제품가 인하여  
업계에 협조 요청 강하게 할 것”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농식품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6일 “식품 원료가격이 올랐다고 이를 많이 쓰지 않는데도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냉철하게 들여다 보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밀 가격이 배 이상 올라갈 때 업체들이 가격을 많이 올렸는데 지금은 밀 가격이 많이 내려갔지만 (제품가격이) 안 내려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하고 업계에 (가격인하) 협조 요청을 강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제품가격을 올리는 대신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행위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사 먹을 때 일일이 깨알같이 확인하지 않는다”면서 “100g 들어가던 것을 90g 들어간다고 충분히 공지하면 문제없겠지만 슬그머니 표기만 바꾸는 것은 ‘꼼수’라고 지적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양을 줄인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로 패키지가 다운사이징으로도 불린다.

정 장관은 용량축소와 관련 제조업체나 유통업체가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마련하는 방안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 있는지는 기획재정부나 우리 부나 공정위원회에서 논의해봐야 하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소비자단체가 나서는데 가장 자연스럽다”고 했다.

또 식품기업이나 외식 업체들이 원자재가나 인건비가 오를 때 이윤을 유지하지 위해 제품이나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는 행위에서 대해서도 “소비자의 권익을 신장하는 쪽으로 업계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농축산물 물가와 관련 “김장 물가는 당초 목표보다 낮은 수준이 됐고 원료 해외 의존도가 높은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도 하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가구당 20포기의 김장비용은 19만

3106원으로 전년동기 21만5037원보다 10.7% 떨어졌다. 다만 농축산물 물가 상승률은 지난 8월 2.3%에서 10월에는 8.0%로 폭이 확대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차관을 물가안정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28개 품목에 대한 중점 관리에 나섰다.

특히 ‘가공식품 물가관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빵과 우유, 아이스크림, 커피, 과자, 라면, 설탕, 식용유, 밀가루 등 9개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품목동향을 수시 파악하고 원가 부담 요인 등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정 장관은 할당관세 확대 및 연장 등과 관련 “현재 42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업계가 원하면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처음으로 발생한 소 렴피 스킨과 관련 “대처를 비교적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작년에 주변국에 다수 발생해 미리 54만두 분량의 백신을 확보했고 발생 이후에 빠르게 추가백신을 들여와 지난 10일 접종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가축방역관과 관련해서는 “반려동물이 아닌 가축형 수의사가 1000여명 밖에 안돼 검역관련 수의사가 많이 비어 있다”며 “처우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중이며 특별채용 요건 완화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차상근 기자 skc8472@metroseoul.co.kr

## “국내 재생원료 사용량 인증 가능해진다”

산업부, ‘재생원료 인증제도’ 시범사업 참여기업과 간담회

주요국들이 재생원료 의무사용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재생원료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업계의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성일하이텍 군산공장에서 재생원료 인증제도 시범사업 참여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배터리, 플라스틱 제품 등을 대상으로 재생원료 의무사용 규제를 추진하고 있어, 우리 수출 기업의 재생원료 사용 인증 수요는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EU는 신배터리지침을 통해 2031년부터 코발트 16%, 리튬 6% 이상 등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미국은 캘리포니아주법을 통해 2022년부터 페트병 재생원료 최소 15% 사용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인증제도가 없어 기업들은 비싼 해외 인증에 의존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구조가 심화할 우려가 있다.

이에 산업부는 원료부터 소재, 부품을 거쳐 최종 제품에 이르는 재생원료 사용량을 추적해 인증하는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지난해부터 마련 중이다.

올해는 배터리 원료, 가전제품 등 5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시범사업에는 삼성전자, LG전자, 성일하이텍 등 최종 제품 생산 기업과 제품의 공급망에 있는 다수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한다.

산업부는 재생원료 인증제도의 인증 방법을 국제표준에서 준용해 글로벌 규제 대응에 적합하게 하고, 국내 우수한 IT 기술력을 활용해 편의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재생원료 사용은 글로벌 규제 대응과 자원 안보 측면에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중요하다”며 “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 플랫폼종사자, 계약 미체결 등 불리

정부 “표준계약서 견본 작업 중”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6일 노무제공자를 위한 ‘공통 표준계약서 및 이를 기반으로 만든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와 관련해 감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계약 미체결 등에 따른 불공정 노무 제공을 막기 위한 조치로, 정부가 공통 계약서 견본을 작성해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서 이 차관은 “모든 일의 출발이자 기초는 계약”이라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종사자의 경우,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관련 내용을 잘 모

르는 경우가 42.3%에 달한다”라는 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이 차관은 “업무를 위탁하는 위탁자와 이를 이행하고 소득을 창출하는 수탁자 간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당사자 간 계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 설명에 따르면 일하는 모든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표준이 되는 계약서 견본을 정부가 나서서 만들고 있다. 그는 “일하는 사람의 형태는 너무나도 다양하다”며 “그래서 표준적인 계약서를 만드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일하는 사람을 위한 의미있는 첫 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 합동 점검

환경부, 다부처 합동성과발표회

정부가 최근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 기술개발사업(R&D)’에 초점을 모으고 있다. 이 같은 생태계 교란종 방제·관리를 위한 중간 점검 차 17일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다부처 합동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고 환경부가 밝혔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 기술개발사업(2017~2023년)’은 국내 고유 생물자원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외래생물 전주기 관리를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그간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SCI)급 논문 135건 게재와 국내 특허 11건 등록, 시제품 19건 제작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환경부는 “이 사업을 통해 개발된 가시박(고압박사), 양미역취(염수) 등 맞춤형 외래생물 방제 기술을 지자체 등 수요 기관의 관리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과학적으로 외래생물을 방제해 효과적인 관리 및 방제비용 저감을 기대하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 中 흑연통제 등 첨단산업 공급망 ‘모색’

산업부-배터리업계

제4차 통상현안대응반 회의 개최  
삼성SDI·LG엔솔·SK온 등 참석  
美·中·EU3대 주요국 통상방안 논의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CI. /각사

정부가 배터리업계와 중국의 흑연 수출통제조치 등 주요국의 첨단산업 공급망 관련 통상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중구 석탄회관에서 배터리협회,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배터리 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통상현안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경과 및 대응계획, 유럽연합(EU)의 ‘배터리법’ 입법동향, 중국 흑연 수출통제 동향과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최근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들은 배터리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

을 국가 안보적인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첨단산업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 다양한 통상정책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지난 3월 IRA 상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친환경차 배터리 요건 등을 규정한 잠정 가이드를 발표했고, 연내 최종 가이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범위

등 잔여 쟁점에 대해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미국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U의 경우 지난 8월 발표된 배터리법에 대한 하위법령 제정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EU 배터리법에서 새로 도입되는 배터리 탄소발자국 및 재생원료 사용의무 등 환경관련 규정에 대한 우리기업 준비현황을 점검했으며, 향후 배터리법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도 기업들과 함께 긴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중국은 내달 1일 시행되는 흑연 수출통제조치를 지난달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당일 긴급회의를 시작으로 민관합동 수급대응회의, 배터리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중국 상무부와 협력해 우리 배터리기업에 대한 우려 해소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금강 제1철교, 철도소음피해 줄어든다

유도상화 개량 등 소음저감 대책 수립

금강 제1철교에서 발생하는 철도소음으로 인해 주거생활에 불편을 겪던 대전 대덕구 석봉동과 신탄진동 주민

들의 소음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김태규 부위원장 주관으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금강 제1철교 유도상화(소음·진동이 흡수될 수 있도록 자갈이 깔린 교

랑으로 변경) 개량 등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실시하기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금강 제1철교 주변은 활발한 도시개발로 현재 4개 단지 5669세대가 거주 중이고, 향후 655세대의 아파트가 추가 준공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